

권리조항	요구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li> <li>-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기업 문화 구축방안을 마련하라</li> <li>-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라</li> <li>-산업현장에서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하라</li> <li>-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li> <li>-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보장하라</li> </ul>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수습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미수습자를 가족 품에</li> <li>- 정부는 현재의 구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라</li> </ul>	
6. (진실의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특별조사위 독립성 훼손 공작을 멈춰라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li> <li>-구조의 책임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li> </ul>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권리조항	요구	
<p>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평등하게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치유와 회복은 재난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당한 공동체를 포괄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라</li> <li>-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라</li> </ul>	
<p>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도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아픔에 동참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행동을 방해하지말라</li> </ul>	<p>세월호 집회 참가 무더기 소환 기소 중단하라</p>
<p>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 참사의 시작이고 기억의 보관은 추모의 시작이다. 희생학생들의 교실을 존치하라</li> <li>- 정부는 추모지원 사업 전 과정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li> <li>-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모사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자와 상의하여 추진하라</li> </ul>	
<p>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소환장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발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li> <li>-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각성하라</li> <li>-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은 공식 사과하고 경찰총장은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li> </ul>	
<p>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p>		